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6년 9~10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Ⅰ 지역이 설계하고 AI가 밀어준다…지역필수의료, 새판 짠다

–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 –
– 16개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AI 기본의료 전략」 등 현장 적용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개최해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16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 2,614억 원) 주요 사업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시·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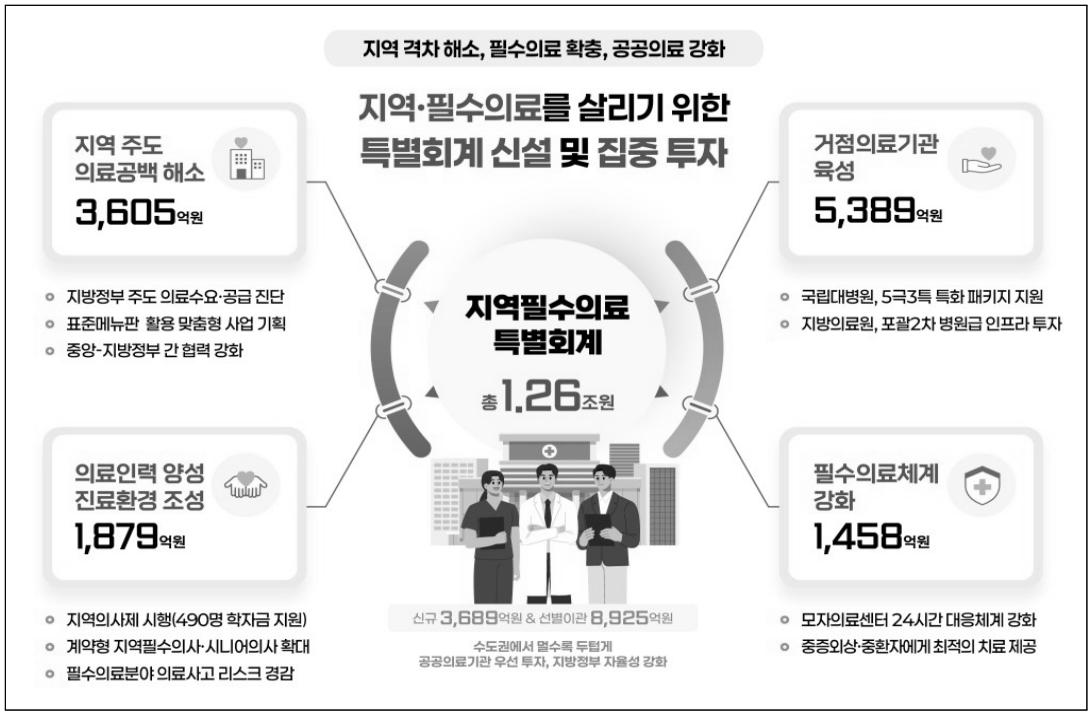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출범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해당 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 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다.

*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

■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편성(3,689억 원)과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 관련 사업의 이관(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 원)'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사업이다.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흐름도 】



■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2,551억 원이 편성되어(전년 대비 1,397억 원 증가) 인력·기반 시설(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및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공공의료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등 임상데이터 연결 및 AI 기반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AI 기본의료 전략」 및 주요 사업 추진계획〉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시·도 및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26.8.6.)에서 확정된 범정부 전략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지원을 목표로 함.

■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건강관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하여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실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576. 지역필수의료총괄과. 2026. 9. 10.

Ⅱ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

■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채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 ('26.7.9.,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 사람의 정보를 위기 정보의 하나로 수집하여,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 둘째, 정책서민금융(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하였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

○ 마지막으로,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수엽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마저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다시 노출되어 가장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614. 급여기준과. 2026. 9. 22.

Ⅲ 전문성 살린 신노년 일자리 확대, 2026년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 선정

– 디지털·안전·환경 등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 발굴 –
– 2019년부터 총 78개 신규 직무 개발, 지역 수요에 맞춰 전국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3일(수)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026년 노인적합형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6년 노인적합형 신규 직무 선정목록(8개) 〉

시상	우수 수행기관	신규 직무	주요 내용
대상	광주남구시니어클럽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신청 지원 및 불법·부당행위 모니터링
최우수상	원주시니어클럽	폐그림책교구사업	폐그림책을 재활용해 교구를 제작하고 아동·노인 돌봄시설 등에 제공
우수상	종로시니어클럽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	현충시설 현장조사, 환경정비, 관람 안내 및 질서 유지
	부산수영시니어클럽	로컬픽 다국어 제작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 콘텐츠 기획·활용 및 다국어 자막 제작
	대전동구시니어클럽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	출소 예정 재소자에게 법무보호 서비스 안내 및 사회복귀 지원
	대덕구시니어클럽	건강증진 금연지도원	금연구역 표지 점검 및 금연구역 환경관리, 금연 계도 등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	노인일자리 우수사례·미담 발굴 및 회고록·자서전 작성 지원
	제주느영나영 시니어클럽	시니어 항공안전 감시단	공항 주변 불법 드론 감시 및 드론 비행 위험성 안내

■ 정부는 2019년부터 기존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신규 직무는 디지털 기술 활용, 안전관리, 환경정비, 법률지원, 관광·문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 이번 선정을 위해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직무의 노인적합성,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전국적인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남구시니어클럽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은 금융권 퇴직자 등 금융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을 돕는 일자리다. 참여 어르신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과 관련된 불법·부당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 올해에는 11명의 참여자가 활동해 73건의 방문상담과 약 1억 500만 원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89건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 최우수상을 받은 '폐그림책 교구사업'은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그림책에서 다양한 삽화 등을 오려 아이들이 놀이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폐기되는 그림책을 재활용함으로써 도서 폐기량을 줄이고, 만들어진 교구를 돌봄시설 등에 제공해 수요기관의 교구 구입 부담도 덜 수 있다.

■ 이 밖에도 현충시설 관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 법률·사회복귀 지원, 금연환경 조성, 인생기록, 항공안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발굴됐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8개 신규 직무의 사업모델을 표준화하고, 전국 지방정부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여건에 맞게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직무는 전문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은 신노년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616. 노인지원과. 2026. 9. 22.

Ⅳ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등 총 264개 질환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5일(목)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 공고했다.

* ① 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② 연골모발형성저하증, ③ TOR1A연관 근육긴장이상증, ④ SGCE연관 근육긴장이상증, ⑤ DPAGT1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⑥ 피어슨 증후군, ⑦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은 환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 관리하며, 추가 검토 요청을 받은 질환에 대하여 ▲증상 발병 연령, ▲치명도 및 중증도, ▲치료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전문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이번 위원회 검토는 2026년 7월 15일까지 접수된 질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다만, 접수된 질환 중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 또는 심근병증 관련 4개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 해당 위원회는 임상유전체의학과, 소아청소년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계 및 법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

** ① SDHB연관 유전성 종양 소인 증후군, ② MYH7연관 심근병증, ③ FLNC연관 심근병증, ④ ACTN2연관 심장 및 골격근 근병증

■ 질환 검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 신청질환명, 원인 유전자명, 환자에서의 유전변이 확인, 유전자검사 결과지, 환자-신청자의 관계 및 주요 증상, 신청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신청 내용의 정확한 확인과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활용된다.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검토 요청 시 필수 제출 정보 〉

필수 제출 정보	기재내용
1. 신청 질환명	국문명 / 영문명
2. 원인 유전자명	필수기재
3. 환자에서의 유전변이 확인	해당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변이가 환자에게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4. 유전자검사 결과지	환자의 변이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첨부
5. 환자와 신청자의 관계 및 임상정보	본인 / 자녀 / 배우자 / 기타 가족, 주요 증상 및 발병 시기
6. 신청 사유	PGT-M(착상 전 단일 유전자 질환 검사) 희망 / 산전 유전자검사 희망 / 향후 임신·출산 계획 / 기타

■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본 제도를 통해 유전질환내력이 있는 가족이 치명적 유전질환을 가진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고 안전한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다만 신청서에 기재한 유전자변이가 해당 질환의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등 유전질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부터 배아 또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의료 및 윤리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신규 질환 목록(7개)**

순번	카테고리	유전질환
1	다기관	호모시스틴뇨증-거대적혈모구빈혈 cbl E형 (Homocystinuria-megaloblastic anemia, cbl E type)
2	다기관	연골모발형성저하증 (Cartilage-hair hypoplasia)
3	신경근육계	TOR1A연관 근육긴장이상증 (TOR1A-related dystonia)
4	신경근육계	SGCE연관 근육긴장이상증 (SGCE-related dystonia)
5	신경근육계	DPAGT1연관 선천성근무력증후군 (DPAGT1-related congenital myasthenic syndrome)
6	신요로계	피어슨 증후군 (Pierson syndrome)
7	외피계	표피박리성 수장족저 각피증 1형 (Palmoplantar keratoderma, epidermolytic, 1)

※ 검토기준: 아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평가

① 발병 연령: 해당 질환이 출생 직후 또는 생후 수개월 이내 발현되는지 여부

② 질병의 치명도: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률이 높은지 여부

③ 증상의 중증도: 질병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지 여부

④ 치료 가능 유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⑤ 삶의 질: 질병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영향의 정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4687. 생명윤리정책과. 2026. 10. 15.